

고령화의 그늘, 작년 치매환자 72만명...노인 10명중 1명

중앙치매센터, 65세 이상 711만8704명중 72만4857명 '환자' 유병률 10.2%, 한해 비용 14.7조원...2024년 100만명 넘을듯



정부가 공공후견제도를 구체화 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인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국민 711만8704명 중 치매환자는 72만4857명으로 유

병률 10.2%를 기록했다. 2012년 54만755명에서 2013년 57만6176명, 2014년 61만2047명, 2015년 64만8223명, 2016년 68만 5739명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 추세라면 6년뒤인 2024년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치매는 최경도와 경도, 중등도, 중증 등으로 나뉘는 뇌 질환이다. 경도환자가 29만20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도 19만4691명, 최경도 12만1768명, 중증 11만6315명 순이다. 환자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72% 수준인 52만483명, 혈관성 환자는 11만9434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1.4%인 51만 7623명으로 남성(20만7234명)보다 2.5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이 40.3%, 80~84세가 25.8%, 75~79세는 20.4% 등 고령일수록 치매를 많이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13만6911명)와 서울(11만5835명) 등은 치매 환자 수가 10만명을 넘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 지난해 치매 관련 비용만 14조7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중앙치매센터는 추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

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직후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부터 추경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중증치매 환자 약 24만명이 부담을 덜게 됐다. 치매 의심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 MRI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요양비 부담률을 낮췄다(중위소득 50% 이하 50% 경감-60% 경감, 중위소득 50.1~100% 0% 경감→40% 경감). 이어 13일에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해 공공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개정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30개 시·군·구 대상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7개월... '중증'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2일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권덕철 복

지부 차관은 "지난해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나서 꼭 8개월만"이라며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준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

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됐다. 정부는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문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 지난해 9월 이행방안 발표 치매안심센터 256곳 개소...지난달 69만건 상담

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대표 의료복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찾아가는 대통령' 세번째 행사로 서울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같은 해 9월18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4월 현재 정식 개소 10곳과 우선 개소 199곳 기준 운영 47곳 등이 문을 열었다. 올 2월 기준으로 센터장 포함 2318명이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한 곳당 9.0명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월 6만8000건이었던 등록건수는 지난달 6배 가까운 37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37만8000건, 선별검

사 31만1000건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중증치매 환자 약 24만명이 부담을 덜게 됐다. 같은 달 치매 의심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에 이어 올 1월부터 MRI 검사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치매환자에게 보다 두터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1월 경중치매환자도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월에는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그동안 요양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중위소득 50.1~100% 치매환자가 40%까지 부담률을 경감 받게 됐다. 50%만 경감되던 중위소득 50% 이하도 60%까지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다. 올해 9월20일이면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선 공공후견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부담을 덜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사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복지부는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치매(중증도 이상) 노인 공공후견인을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 중심으로 활동케 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거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산이다. 권덕철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며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